

# 속 기록

- 회 의 명 : 제340차 위원회 전체회의
- 일 시 : 2022. 9. 23(금) 14:02 ~ 17:28
- 장 소 : 영상회의
- 출석위원 : 박종관      위원장  
                  박경주      위원  
                  유은선      위원  
                  이시백      위원  
                  이원재      위원  
                  이진희      위원  
                  장인주      위원  
                  전고필      위원  
                  정유란      위원  
                  정정숙      위원  
                  정종열      위원  
                  홍태림      위원

## 1. 성원 보고

**박종관 위원장** : 제340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예술가의 집 노후배관 보수공사 공사로 인해서 부득이 영상회의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회 전체회의는 2023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추진 계획을 비롯하여 의결안건 3건, 보고안건 4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근로자대표로 김효은 노동조합위원장이 참석하여 회의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남요원 상임감사님과 감사실장,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을 비롯한 본부장 전원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담당부장과 김지영 기획조정부 과장을 포함한 사무처 직원 23인이 온라인으로 참관하고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회의의 성원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은 성원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기획조정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 12인 중에서 9인이 참석해 주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2. 개회 선언

**박종관 위원장** : 방금 보고를 받으신 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3. 전차(前次) 회의결과

**박종관 위원장** : 온라인으로 회의가 진행되는 관계로 회선에 문제가 있다면 회의를 중지하고 원활한 회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의사를 표시해 주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차(前次) 회의의 주요사항을 보고해야 할 텐데요. 전차(前次) 회의의 주요사항에 대해서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 :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차(前次) 위원회 관련 결과는 회의자료 4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난 339차 전체회의의 경우 의결안건은 없었습니다. 보고안건으로

2023년 공모사업 준비상황 보고 및 중점개선 방향 등의 논의(안) 8건이 상정되어 모두 원안대로 접수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전차(前次) 회의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전차(前次) 회의 보고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사항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전차(前次) 회의 보고를 접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의 결 사 항

**박종관 위원장** : 오늘 의결안건은 말씀드린 대로 3개의 의결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의결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69호 2023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추진계획(안), 의안번호 제970호 2023년 창작산실 대본공모 유통프로모션 행사운영 주관처 공모 결정의 건, 의안번호 제971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전2030 전략체계 일부 수정(안) 3개 의결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첫 번째 의결안건은 2023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추진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준화 지원총괄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안건번호 제969호 2023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추진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7페이지입니다. 전차 회의에서 2023년도 공모사업의 주요 개선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년 대비 무엇이 바뀌는지를 재확인하겠습니다. 지난 달 보고 이후 일부 변경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변경된 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 올해 공모사업의 공모예산은 총 685억입니다. 회의자료 11페이지에 2022년도 공모사업 주요 방침 및 개선사항이 지난번 회의에서 보고를 드렸던 전년 대비 바뀌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의 예술인의 편의 부분인데요. 1-1의 공모시기 일원화는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대로 기존에는 1차와 2차로 나눠져 있던 공모시기를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다음 주 금요일인 9월 30일에 대극장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요. 그와 동시에 공고가 나가고 접수가 진행되게 됩니다. 일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전차 회의 때는 ‘아르코 스타트’라는 가칭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통칭 저희가 ‘준비지원’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각각의 사업들마다 발표 전 단계까지를 지원하는 준비지원사업들이 많이 생겨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각각 사업 내의 별도 트랙으로 들어가 있으니 신청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통합했습니다. 이 부분을 전차

회의 때는 ‘아르코 스타트’라는 가치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창작의 과정’이라는 사업명으로 네이밍을 해 봤습니다. 딱히 마음에 드는 사업명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논의 과정에서 예술의 창작 과정을 지원하는 문예진흥기금과 복지재단에서 창작준비금 형태로 지원하는 지원금 사이에 혼동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직관적으로 ‘창작의 과정’이라고 사업명을 붙였습니다.

1-3번의 예산편성 항목 확대는 기존에 보고를 드렸던 대로, 기존에는 사업마다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모두 달랐는데 바뀌는 부분은 모든 사업이 모든 예산의 항목을 편성할 수 있도록 바꾸는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1-4의 설명회 및 질의·응답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아르코예술극장에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각 사업별 부스를 마련해서 질의·응답 세션을 진행하고 10월 10일까지 저희가 공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사업별로 질의를 받을 겁니다. 이후 10일까지 받은 질의를 가지고 10월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각 개별 사업별로 줌을 통해서 질의·응답 및 컨설팅 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설명회 당일엔 오지 못한 분들, 지역에 계신 분들이 사전질의를 하고 줌 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올해 새로 생기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의 예술지원정책의 안정성 유지 부분이고요. 2-2 부분이 지난번 회의에서 보고드린 부분과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전차 회의에서는 경력단절 이음지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렸던 내용은 지원 자격에서 ‘최근 5년간’처럼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 임신·출산, 육아, 병역처럼 경력단절의 사유가 있으면 증빙하게 해서 2년을 추가하겠다는 것이 저희가 보고드린 내용이었고요. 전차 회의 중에 박경주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이, 코로나 상황으로 창작에 참여하지 못한 상황이 있으니까 주요 활동 실적..... 보통 저희가 최근 3년간 주요 활동 실적을 지원신청서에 기입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5년으로 늘리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박경주 위원님의 의견을 검토하면서 지원신청서상에 ‘최근 3년간’으로 되어 있는 실적을 ‘최근 5년간’으로 바꾸는 안을 검토했었는데 부서들과 의견을 나누다 보니 전반적인 경력단절 이음지원이라는 국정 기조와 코로나 때문에 몇 년간 창작이 힘들었던 상황을 감안했을 때 아예 경력 또는 활동의 제한 기간을 폐지하는 것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보고를 드린 것에서 조금 더 발전된 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시각의 우수기획전시에 지원신청을 하려면 기존에는 최근 5년간 2회 이상의 전시기획 경험이 있어야 지원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경력단절을 고려해서 최근 7년으로 연장하는 안이 지난 보고(안)이었습니다. 현재의 보고(안)에서는 아예 ‘최근 5년’, ‘최근 7년’의 제한 없이 2회 이상의 전시기획 경험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원신청서 양식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최근 3년간 주요 활동 실적은 최근 5년으로 늘리는 안을 검토했었는데 오늘 보고를 드리는 최종(안)은 3년 또는 5년의 기간 없이 신청 주체가 자신의 활동 실적 중에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을 자율적으로 기술할 수 있도록 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의 때 보고를 드린 내용과 많은 변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 다년지원 확대입니다. 기존 7개 외에 3개 사업이 추가되어 다년간 지원으로 공모할 예정입니다. 2-3 단계별 지원 강화는 보고드린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2-4 지역균형지원 역시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전체 사업에 적용하고 중장기창작지원,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은 의무적용을 하는 안입니다. 의무적용의 형

태는 아예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별도의 그룹으로 구성해서 별도로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5의 성과공유 및 확산과 3-1의 중복 심의 금지, 3-2의 유사/중복사업 검토 강화는 전차 회의에서 보고를 드린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일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9월 30일에 설명회와 함께 공고가 나가면 10월 4일부터 접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접수 마감은 사업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공모 1차와 2차를 합쳐놓은 것이기 때문에 전체 의결은 12월 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고 12월 말에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전체 사업에 대한 공모사업 총괄표와 지원신청부터 접수, 심의, 결정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전년 대비 크게 변동사항은 없고요. 21페이지를 보시면 회계감사 수수료 가이드라인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된 단체들이 정산할 때 회계법인을 통해서 회계감사를 받는 부분인데요. 아까 저희가 창작의 과정이라는 말로 통합했다는, 기존에 준비지원에 해당하는 사업들이 많이 생겼다 보니 500만 원, 1,000만 원 등 소액으로 지원받는 경우도 많이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가장 적은 금액의 기준이 1,500만 원 미만이다 보니까 지원금을 500만 원을 받더라도 1,500만 원을 받는 단체와 똑같이 21만 7,000원을 수수료로 내야 하는 부분이 현장의 문제 제기가 있어서 700만 원 미만의 구간을 새로 신설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이라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지난번 회의 때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 중에 외국인 지원 신청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차 회의에서는 위원회 의결 전에 각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회의 이후에 내부적으로도 검토했습니다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한 달이라는 사이에 그런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현황 파악도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마땅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점은, 저희가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이번 공모에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지원총괄부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결까지 이르기 위해서 8월 정기위원회 때도 이 사안의 추진 과정 중에 보고가 있었고요. 이번에도 작성 중인 의결안건을 위원님들께 미리 보내드려서 검토하실 시간을 최대한 많이 드리고자 했습니다만, 역시 위원님들의 최종 검토를 받아서 의결해야 할 사안이기에 때문에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을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논의를 해 주시죠.

**이시백 위원 :**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조금 수순이 영겼습니다만, 지금 사업비 지출 계획의 총괄표에 총론적인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문학창작육성 예산이 여러모로 평균적인 삭감의 폭을 넘어서 장르 간에서도 팔목할 만큼 많이 줄었습니다. 그간 문학창작의 저변과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사무처와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장르 간 간격도 많이 좁혀진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21.9%라고 하는 가장 어려운 장르에 가장 많은 폭의 예산이 삭감되면서 2년 동안 애를 쓴 복원의 노력이 무산되는 감이 있습니다. 총론적으로 여러 가지 고충이 있음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참여는 합니다만,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이러한 문학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제시하셔서 다른 기금이든 사업이든 또는 추경 등에 적극적으로 늘려

주시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점은 문학이라는 장르의 특성상 예술창작지원 외에는 해당되는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오로지 유일한 지원의 사업인 문학창작육성 사업의 예산이 21.9%나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 작가들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지가 벌써부터 조심스럽고 걱정이 앞섭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그러한 예산 반영에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는 문학 특정 장르의 문제가 아니라 지원에 있어서 공정성이나 균형성 측면에서 어느 정도 표준을 맞춰주는 게 현장에서의 신뢰도, 지원사업에 대한 신뢰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총괄 요약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주 위원 :** 우선 지난 회의 때 말씀드렸던 경력 제한 부분에 대해서 폐지하는 방향으로 사무처에서 검토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회의 때 제안드렸던 외국 국적의 이주민 예술인과 관련해서 지원신청의 검토 부분에 대한 사무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지금 예술인권리보장법이 9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상으로는 더 이상 예술인복지법에서 이야기를 하는 예술활동증명 자격이 더 이상 기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술활동을 주목적으로 대한민구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예술인권리보장법과 관련된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연계해서 기준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오늘 논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회의 이후 고민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예술활동증명과 관련된 것은 제가 2020년 가을에 제안했던 사람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이 통과되고 문체부에서 공식적으로 이제는 예술활동증명 자격과 무관하게 예술활동을 주목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은 모두 관련된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공표를 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개인의 부분에서 예술활동증명이라고 하지 말고 예술활동증명에 있는 각각의 지원신청이 가능한 기준이 있잖아요. 그것을 나열해서 올리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예술활동증명이라는 것이 저도 안 되어 있는데요. 예술활동증명을 받는 절차의 기준이 까다로워서 한국인 예술가들도 신청했다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원신청에서 한국인은 예술활동증명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는데 외국인은 예술활동증명이라는 부가적인 증명서를 내라고 하는 것은 차별로 볼 수 있다는 현장의 의견이 그 이후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좀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다면 차라리 각각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지원자격에 명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문체부의 예술인권리보장법 관련해서는 예술활동을 주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술인비자와 문화예술비자가..... 그러니까 E6와 D1비자가 예술활동을 주목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유일한 비자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예술활동증명 플러스 예술활동을 주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E6와 D1비자까지 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제안 감사합니다. 일단 사안 정리를 해야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이 있으면 먼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태림 위원 :** 사업공모를 해서 심의결과를 확정하기 전 단계의 불공정행위 문제나 성희롱 및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하는 기준이 회의자료 19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원사업은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해서는 수사나 기소된 사실이 인지되거나 수사나 기소가 없더라도 명확한 문제가 드러난 자나 단체를 위원회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존의 기준을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현재 시간상으로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불공정행위나 성희롱·성폭력 관련 대응을 공모와 심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구조는 만들 수가 없는지 고민이 되기는 하거든요. 가령 예술위원회가 심의위원 풀을 구성해서 심의위원들이 심의할 때, 이번에 예술인복지재단 실무자를 심의위원으로 모셔서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서 불공정행위나 성희롱·성폭력 관련해서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신고나 검토가 진행 중인 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 절차를 한번 두기는 했거든요. 물론 저희 공모나 사업심의가 워낙 방대하고 양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이고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불공정행위나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생기면 사후적으로 그때그때 어렵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풀 방안이 없을지? 위원님들도 그렇고 사무처직원들께도 그렇고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시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려운 지원 여건과 관련한 내용 중에서 문학이 올해에 비해서도 적은 예산을 내년에 운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단순히 문학이라는 장르 안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 예술지원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장르 특성의 이해가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어려움에 대해서 예산심의과정이나 추경 등 각종 예산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에 최대한 대응을 해서 지금의 지원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 8월에 2023년 정부확정안을 위원회와 예술현장에 보고드리면서 내년 문체부 예산이 감액 편성되는 과정에 우리 위원회가 3% 정도의 소폭 증액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었던 어려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예산 결정 과정과 그 이후의 과정까지도 지속적으로 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위원회와 예술현장이 함께 노력해야 하고 위원장과 사무처 역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드린 바가 있어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상기하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먼저 위원장이 총괄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저희 지원범위의 외국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단 먼저 담당부장이 최소한 위원회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박경주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이 부분의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대해서는 기술적 대응도 필요하고 세세하게 몇 가지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위원회가 논의 이상의 것은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간을 조금 할애해서 위원회 차원의 논의와 대안 마련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태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업 결정 과정에서 이른바 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직전에 성희롱이나 불공정행위를 검증하는 절차 강화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위원회가 검토해서 적용할 제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내년도 공모(안)을 의결하는 것이 타당

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2개의 안에 대해서 담당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예, 두 번째 의견 관련해서는 줌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채팅방을 보시면 박경주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도 지금 확인했습니다만, 3번부터 보면 '난민법'으로 인정된 사람 그리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체류자격 그리고 E6와 D1비자에 대해서 제안해 주신 부분입니다. 지난 전체회의 전에 의견을 주셔서 저희도 부랴부랴 급하게 준비하고 공부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난민법이나 출입국관리법 같은 경우 저희는 좀 생소한 법률이고 아직 법률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난 회의에서 영국이나 네덜란드 등 외국의 사례를 설명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 나라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전정보와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저희 상황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기는 합니다만, 한 달 사이에 이와 관련해서 이해당사자가 되는 분들과 의견을 나눌 과정은 없었습니다. 사실 다른 부분들은 저희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니까 변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의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어쨌든 지원신청 범위가 대폭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해관계를 거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위원회 논의만으로 의결하는 것은 어렵다는 게 담당 부서장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신 의견과 관련해서 현실적인 부분으로 보면 지원심의 후보단을 할 때는 복지재단의 담당 부서장께 부탁해서 사전 스크린을 했는데요. 현실적으로 지원사업 전체 몇천 건에 대해서 그 방식을 사용할 수는 없는 현실이고요. 말씀하신 그런 스크린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히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작년부터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신청 자격에 체크리스트를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공정행위나 성희롱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지원 신청자가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일차적으로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본인이 체크하도록 되어 있고 그에 대한 필터링은 일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추가로 체크리스트를 도입한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취지 때문에 도입한 부분인데요. 관련해서 전체를 스크린 하는 방법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현재는 신청자 본인이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하는 경우가 아니고는 현실적인 대안은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홍태림 위원 :**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불공정행위나 성희롱·성폭력 관련된 체크리스트를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 대상이 된 분입니다. 신고 대상은 그 사건에 대해서 종결이 안 났기 때문에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신고 대상이라는 게 어떤 말씀이죠?

**홍태림 위원 :** 신고 되신 분이 있잖아요.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이미 신고가 되어 있는 분이요?

**홍태림 위원 :** 예. 내가 불공정행위를 해서 예술인복지재단에 신고가 된 사람인데 종결이 안 나서 진행 중인 상황이면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안 해도 되는 것이죠?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지금 세부 문안이 정확하게 기억 나지가 않는데요. 제 기억으로 체크를 하는 게 맞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태림 위원** : 그런 경우도 체크를 하도록 안내가 되어 있다고요?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예.

**박중관 위원장** : 보다 정확한 대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확인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중관 위원장** : 예. 이것을 확인해서 알려드리고 논의를 진행하는 게 맞아 보이고요. 홍태림 위원님께서서는 혹시 그밖에 추가하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홍태림 위원** : 없습니다.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체크리스트를 두고 있다면 당장 보완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인할 부분만 확인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중관 위원장** : 예,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14시 05분에 이원재 위원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셨고요. 14시 18분에 이진희 위원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4시 05분 이원재 위원 회의 참석)

(14시 18분 이진희 위원 회의 참석)

**박중관 위원장** : 그러면 박경주 위원님께서 단체 메신저에도 올리시고 저희가 화면으로도 준비를 했습니다. 달라진 여건에서 외국인과 관련하여 문예진흥기금의 수혜 자격을 확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논의를 받아 주셨으면 합니다.

**박경주 위원** :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사무처에서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은데요. 기존에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한 것이 F5, F6, F4, 난민 인정자, 탈북자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이 종류의 비자 타입은 복지부나 여가부 관련 사업에서도 충분히 지원신청이 가능한 자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자고 하는 것은 예술활동 증명이라는 추가적인 서류를 내라고 하는 것이 일반 내국인 지원자와 비교했을 때 차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이런 자격인 사람은 신청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예술활동을 주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이 부분은 이번에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되면서 E6비자와 D1비자는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답변도 받았고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예진흥기금이기 때문에 문화예술 창작과 관련된 지원금이라서 당연히 이 비자 타입을 추가적으로 넣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은 E6과 D1입니다. F5, F6, F4, 난민 인정자, 탈북자는 기존에 저희가 승인했던 부분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박경주 위원님, 이것은 궁금해서 묻는 것인데요. 예술홍행비자 E6와 문화 예술비자 D1을 답변한 곳은 어디인가요?

**박경주 위원** : 문화체육관광부에 예술인권리보장법 관련해서 외국인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올렸고요. 제가 그렇게 답변받았습니다. 그리고 국회 유정주 의원실과 소통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문체부와 유정주 의원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이미 예술홍행비자 E6와 문화예술비자처럼 예술을 주목적으로 있는 사람은 들어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거의 완료가 되었고 답변도 제가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넣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과 관련된 지원사업을 시작하게 된 의미 있는 기관인데요. 지금 와서는 대한민국의 국적이 아닌 사람은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건 굉장히 시대적으로 뒤떨어져있고 잘못된 선례로 남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의견도 드리고 싶습니다.

**남요원 감사** : 방금 말씀하셨던 신문고를 통해서 문체부의 답변서를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박경주 위원** : 예.

**남요원 감사** : D1비자와 E6비자 답변서를 지원총괄부에 보내주실 수 있으니까요?

**박경주 위원** : 제가 이미 9월 2일 회의 때 자료로 보내드렸습니다. 캡처한 화면을 보내드렸어요.

**남요원 감사** : 그 답변서가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와 있는 겁니까?

**박경주 위원** : 예, 이미 보내드렸어요.

**남요원 감사** : 예, 알겠습니다.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지난 회의 때 서면의견서에 첨부자료로 주신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경주 위원** : 예, 제가 차 대리님께서 원본 캡처를 보내드렸거든요. 그런데 차 대리님께서 그것을 타이핑해서 주셨더라고요. 필요하시면 제가 받은 자료를 그대로 보내드릴게요. 지원총괄부에 보내드리면 되나요?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문체부 답변의 일부 내용이고요. “이주예술인도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해석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난 번에 보내주신 자료는 당연히 검토했었는데요. 거기에는 E6와 D1 관련된 문체부 답변은 없었거든요.

**박경주 위원** : 예술활동을 주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모두 해당이 된다는

답변이 되어 있고요. 그것이 바로 예술진흥비자와 문화예술비자를 이야기 하는 것이죠.

**남요원 감사 :** 아닙니다. 명확하게 그것은 구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D1비자는 예술인비자가 맞고요. E6비자는 예술이라고 하는 포괄적 개념에 의한, 우리가 말을 하자면 필리핀에서 대중가요를 하는 대중가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예술활동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E6비자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E6비자는 지금 현재까지 발급된 것이 대략 5,000~6,000명에게 발급되어 있고요. 그리고 엄밀하게 이야기하는, 한국 문화예술위원회라고 하는 공공기관이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는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100여 명 정도 비자가 나가 있습니다.

**박경주 위원 :** 그것은 D1비자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남요원 감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E6비자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술인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예술인들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 위원님께 여쭙보고 싶었던 것은 문체부가 신문고에 의해서 그런 답변을 했다고 해서 “E6비자나 D1비자를 명시적으로 문체부가 규정한 것인가?” 이것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보니까 명시적으로 그렇게 규정은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경주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자면, 지금 감사님께서 예술인의 비자 시스템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E6비자는 가수만 받는 게 아니고요. 공연예술을 하는 사람들도 받습니다.

**남요원 감사 :**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E6비자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중 엔터테인먼트의 종사자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롯데월드에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모두 E6비자를 갖고 들어오신 분들이고요. 또 하나 외국에서 발레를 했던 분들도 경제활동을 하려고 하면 E6비자를 받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한국의 서울시향이라든지 서울심포니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주자들도 D1비자를 갖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E6비자를 갖고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E6비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무부나 문체부에서는 한국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뭔가를 기여한다는 측면보다는 여기에서 경제활동을 통해서 자기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그러니까 2023년도 공모사업에 이것을 반영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런 문제는 별도로 깊은 논의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사업심의를 하는 것과는 별개로 위원님들께서 이 주제를 놓고 다시 한번 논의하시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E6비자 안에는 기초예술 범위를 포함한 외국인에 대한 다양한 체계가 있어서 일괄 적용하기에는 살펴볼 지점이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조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희 위원 :**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나열된 것을 보면 예술인을 증명하는 내용보다는 대

한민국에 어떤 조건을 가지고 체류하는지에 대한 신분 증명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데 신청 자격을 나열한 기준이라면 신분이 어떻게 증명될 것인가에 집중해서 항목들을 규정하는 게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으로 6번에서 갑자기 E6와 D1이 예술인을 증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논의로 넘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서 1번이나 2번 같은 경우도 예술인 여부와 상관없는 신분 증명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혼인을 중심으로 두고 대한민국에 어떻게 체류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어떻게 체류하고 있는지에 대한 신분의 증명이나 조건에 따라서 신청 자격에 대한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인이나 아니냐를 신청의 자격으로 1번부터 5번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이라서 6번에 대한 지금의 논의는 다른 차원의 논의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E6비자까지 포함시키는 것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신분을 증명하는 차원으로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이원재 위원 :**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 논의의 핵심은 그동안 계속 제기되어 왔던,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국제도시화가 되면서 외국인 예술가들에 대한, 혹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국적이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예술가로서의 권리나 창작의 권리로 확장해야 한다는 게 지금까지 지속되었던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준에서 6번째 항목으로 제안해 주신 것은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으로 권한을 열어주는 방향이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E6는 수입비자가 맞죠. 수입비자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고용추천을 받아야 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D1과는 다른데요. 그런데 C4와 E6는 다르잖아요. E6는 장기체류비자이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E6를 포함하는 게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감사님이 말씀하시는 활동 형태가 현실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아는데요. 저는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실제로 E6를 열어도 얼마나 지원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여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E6와 C4가 다르기 때문에 E6를 열고 저희가 지원되는 것을 보면 됩니다. 그냥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선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블록 하는 것보다는 D1은 당연히 열면 되고 E6도 열고요. 그런데 저는 거의 지원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충분히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지원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해 위원들이 충분한 논의를 못했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면 D1을 먼저 열고 이 부분에 대한 추가 검토하는 등 계획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추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두 분의 의견을 요약하면 E6와 관련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E6를 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만, 이것이 실무추진상에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된 것인가와 관련해서 어려운 지점이 있다면 D1부터 먼저 열고 확대하는 게 어떠한 의견을 주신 겁니다.

**이진희 위원 :** 이렇게 여는 기조에 대해서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신분 증명을 강조하고 강화하자는 취지는 아니고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신분 증명을 지나치게 강화하는 것은 차별적인 요소일 수도 있기 때문에 6번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장하는 것이 예술위가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다른 국적을 가진 예술인들의 활동을 어떻게 장려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6번에 해당하는 내용은 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실장의 얘기를 들겠습니다.

**김기용 감사실장** : 저는 그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현실적으로 이것이 허용될 경우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보조금법 상으로 정산해야 하는데, 만약 그럴 리는 없겠지만 외국인이 보조금을 받고 사업을 안 하시거나 정산을 안 하시고 다시 해외로 나갈 경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 부분이죠. 이 부분도 허용하실 때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과거에 이런 어려운 사례가 있었다고요?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지난 회의에서 송시경 본부장이 잠깐 언급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원재 위원** : 마지막으로 방향이 그렇게 동의 된다면,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산 문제만이 아니라 창작환경 서비스 시스템이 붙어야 할 텐데요.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냥 저희가 올바르게 때문에 하자는 것은 리스크가 있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검토 기간을 갖고 계획을 갖는 것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입장을 정리하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번에 바로 적용하는 여부는 사무처에 위임했으면 좋겠다.”, “위임 후 검토해서 올해 바로 적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만약 힘들다면 내년도를 목표로 두고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사실 8월 정기위원회를 할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사무처장직무대행도 그 얘기를 했죠. “방향은 그게 옳다.” 다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충분한 행정 진행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안자인 박경주 위원님의 의견을 들겠습니다. 정기공모사업을 의결해야 하는 위원회이거든요. 정리를 부탁드리고 후속 논의가 있다면 논의를 이어갈까 합니다.

**박경주 위원** : 예전에 외국 국적인 사람이 지원금을 받고 문제가 있었던 게 어떤 사건인가요? 전혀 정보공유가 되지 않은 상태라서요.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아주 오래전 사건입니다. 재외동포를 포함한 사업에서 정산이 안 되었던 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경주 위원** : 재외동포죠?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재외동포 관련 사업에서 외국인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박경주 위원** : 재외동포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문화예술기금을 신청한 경우가 없

거든요. 재외동포는 가능했지만요.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9월 2일 회의 때 드렸던 자료에 보면 그런 사무처의 염려를..... 왜냐하면 실제로 행정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렸던 게 보증보험가입증서 같은 경우가 필요하다면 추가할 수 있다고 제안을 했던 부분입니다. 보통 한국인들도 다른 위원회나 재단 같은 경우 기금을 받으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기업의 사회공헌팀에서 기금을 받으면 어떤 재단은 그런 보증보험을 요구할 때가 있거든요.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이 문제라면 보증보험가입증서를 지원신청 자체에서 요구하지 말고 교부가 확정되었을 때 교부하는 단계에서 별도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면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은 해결될 수 있지 않나 해서 9월초 회의 때 이미 자료를 드렸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정산에 대한 책임 범위가 공공기관에는 있는 것인데요. 만약 그런 부분에서 행정 진행이 어렵다고 한다면 보증보험 등을 통해서 이른바 조건 부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박경주 위원 :** 예.

**박종관 위원장 :** 그리고 지금처럼 정기공모의 의결 직전에 계속 문제점이 나올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회가 계속 대안을 내며 의결안을 수정해서 의결하기에는 복잡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박경주 위원 :** 마지막으로 제가 최종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D1비자 소지자는 많지가 않거든요. 몇백 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는 비자라서 굉장히 어렵다고 제가 듣고 있어요. 그중에 많은 부분은 한국문화를 연수하러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호의적인 분들인데요. 저는 사실 E6와 D1이 같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지는 않지만 대안적으로 마지막 제안을 드리자면 문화예술비자(D1비자)를 추가하고 보증보험가입증서를 교부 시 제출하는 것으로 해서 시범사업처럼 진행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제안입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원신청접수를 받고 지원신청을 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대민서비스를 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사실 있습니다. 내국인들에게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해를 시키고 있는 상황 속에서 1명의 담당자가 상당히 많은 수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언어적 문제로 인해서 그런 서비스를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부담이 많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D1이나 E6비자를 쓰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영어권뿐만 아니라 저희가 잘 사용하지 않는 외국어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대외적, 대내적인 환경들을 고려해서 예술위원회 제도로 안착할 수 있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실 것을 실무자로서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도 당연히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하시는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들이 안정된 제도로 정착되려면 그 안에 충분한 사전적 검토와 협의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조금 주시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실무 쪽의 어려움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원재 위원님께서 이전에 발언해 주신 정리한 3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해 주시죠.

**이원재 위원** : 저는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신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원칙적으로 맞아도 공모사업에서 사고가 나면 안 하느니만 못하니까 취지에는 동의를 하고요. 준비기간이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단순히 열어서 공모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언어서비스 외에도 훨씬 더 디테일하게 봐야 할 것이 정산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지원하는 담당자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시스템이 만들어지려면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방향성에 이견이 없으면 그렇게 가고요. 마지막으로 저의 입장은 당장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준비를, 그런데 말로만 “노력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내년 정도로 목표를 두고 준비기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정숙 위원** : 저도 이원재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박경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 그러니까 우리 문화예술위원회가 조금 더 선도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예술지원과 관련된 문호를 개방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신분 확인과 관련해서 E6비자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장기비자이기는 해도 90일 이상의 장기비자이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술창작은 약 1년 정도가 보장되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신 대로 취지와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희 모두가 공감하고요. 다만,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담이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검토해서, 그러니까 “내년까지 자세히 검토를 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우리가 의결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여기까지 논의하면 어떻겠습니까?

**박경주 위원** :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술활동증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도 별도의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예술인복지법 상에 명시된 조항을 그대로 저희가 사용해서 예술활동증명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 부분은 실무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1번과 2번에 관련해서는 이진희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희 위원** : 1번과 2번은 전체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신분을 증명받기 위해서 혼인관계 중심으로 신분을 증명하는 시스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술위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혼인으로 신분을 증명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허용하면서 E6비자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1번과 2번은 사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통용되는 신분증명 방식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건 무리가 있죠. 물론 이 제도가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옳지는 않지만 한국에서 가장 많이 통용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미 이것을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리고 6기와 7기 위원회의 지속적인 성과 중에 하나가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범위에 대해서 지원구조를 넓히려는 노력을 했고 몇 가지 제도를 정착한 것이 성과라면 성과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저는 이것이 논의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는 말씀을 이미 지난 회의 때 드린 바가 있고요. 오늘도 역시 이런 것들이 논의되는 것이 큰 가치체계를 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제도로 무르익어 의결이 가능한지? 내년에 당장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판단해야 할 내용은 “1번부터 5번까지 넣자.”, 혹은 “D1비자만을 넣자.” 물론 모두 옳은 이야기입니다. 혹은 정산에 부담이 있는 것이라면 보증보험 등 각종 보험제도를 통해서 해결하자는 대안들이 완벽한지? 혹은 이 법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것인지? 이른바 저희가 하고있는 것이 문예진흥을 위해 50년 된 제도를 유지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적용을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위원님들 나름대로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의결 범위로 끌고 와야 되거든요.

**남요원 감사** : 저도 보완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격의 문제 그리고 E6, D1 등 우리의 비자 정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문제는 사실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이 제도를, 그러니까 아까 이원재 위원이나 정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조금 더 개방성에 방향과 문호를 확대하고 열어가는 그리고 문화선도 기관으로서 내외의 구분과 차별 없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예술인들에게 문을 열어주자는 방향과 가치에 있어서 합의적 동의가 될 수 있다고 하면 방금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제도 도입을 위해서 실무적으로 정말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살아오신 삶의 학습과 경험의 범위 안에서 의제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여기에서 합의적인 결론까지 도달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향에 대해서 합의적 동의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오늘은 이 동의에 합의하고 향후 일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제도 도입을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가령 우리의 지원계획 자체가 바뀌는 것 아닙니까?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 확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관리 감독 기관인 문체부와 사전적 협의를 해야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실무 부서로부터 별도로 보고받고요. 이 제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것인지를 실무적으로 한번 보고받으시고 그 내용을 가지고 향후 일정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두 분의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을 가지고 첫 제안자인 박경주 위원님과 함께 동의가 된다고 하면 지원총괄부로부터 제도 도입을 위한 보고를 한번 받으시는 게 어떻습니까?

**박종관 위원장** : 예, 감사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같이 들으신 내용이니 까요. 발언을 안 하신 위원님들 중심으로 발언하시고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죠.

**이시백 위원** : 전체적인 취지와 방향은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안이나 방안은 추후 별도의 논의 기회를 마련해서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절차를 거쳐서 확정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정유란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정유란 위원** :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시행 여부와 관련해서는 제가 의견을 물어야 하거든요.

**정유란 위원** : 사무처에서 판단해 주시고 단계별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알겠습니다. 제가 사무처장직무대행한테도 의견을 묻겠습니다. 혹시 이 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종열 위원님이나 전고필 위원님의 의견도 같으시면 꼭 말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정종열 위원** : 이시백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전고필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전고필 위원** : 저는 모두 동의하는데 예술현장과도 한번 얘기를 하고 힘을 모아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고요. 부처에서도 개방성 있게 이런 정책을 포용할 수 있게 하는 정비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제가 화면에서 보이는 위원님들께 의견을 물었고요. 박경주 위원님께서도 의견에 동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은선 위원** : 저도 이시백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박경주 위원** :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사무처에서 고민하시는 부분들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상적으로 지금은 안 되니까 다음에 하자는 것은 맞지 않고요. 이번 구체적으로 문체부와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소통 소위원회에서도 계속해서 문체부 쪽에 제안을 드렸던 것이 “이주민예술가의 처지와 예술활동을 주목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 국적 예술가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간담회를 열어 달라.”라는 부탁을 수차례 드렸는데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거든요. 저는 예술현장이라는 것이 한국인 예술가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술 창작을 하고 있는 이주민예술가들과의 간담회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요. 그 현장에는 반드시 창작활동을 주목적으로 한국에서 체류하고 계신 분들도 참여해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에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E6비자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실제로 미술관에서 전시도 하고 공연을 하는 분들을 소개도 해 드리고 싶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면 좋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감사합니다. 사무처장직무대행의 얘기를 들겠습니다. 물론 8월에도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 회의에서 의결을 해야하니 사무처장직무대행께서는 다시 한번 사무처의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 : 예, 어쨌든 방향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얘기를 나누고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추진할 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자문을 한 번 받으면 어떨까 합니다. 또 하나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전차 회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상호주의를 택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국내에 대략 80% 국민들이 지원신청을 했다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반드시 이러한 부분은 현장 예술인과의 수기 과정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논의도 좀 하고요. 세 번째로 보조금에 대한 정산 문제는 박경주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재외동포교류지원인데요. LA에 계셨던 분이 신청을 하셨다가 먹튀를 한 겁니다. 해결되지 않은 건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보조금 정산 문제가 좀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신청 자격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 필요하다면 법무부나 외교부 등 당국과의 협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추진하되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내년도 먹거리를 준비하는 공모가 바로 시작되었고 12월 내지는 1월까지는 정신이 없을 겁니다. 사무처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방식으로 추진하되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담당부장께서는 향후 진행과 관련된 부분만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아까 저도 보고를 드릴 때 원칙적으로는 공감합니다만 준비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긴 팀의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법률적인 검토입니다. 당연히 그 비자에 해당하는 예술활동가들이 많지만 예외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E6비자의 프로야구팀 감독이나 D1의 태권도 선수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아주 극소수라고 하더라도 행정을 하는 사무처의 입장에서는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2가지 중심, 의견수렴과정과 법적인 요건 검토 위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단, 사무처장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월까지는 저희가 진행할 여력이 정말 없습니다. 저조차도 전체 공모 진행뿐만 아니라 저희 사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12월까지 손을 놓고 있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일정 계획을 세워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한 작업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만, 박경주 위원께서 논의 중에 제안하셨던 현장소통소위원회나 소위원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은 지속해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 논의는 여기에서 종결하고 다른 사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희 위원** : 추가로 의견이 있습니다. 아까 홍태림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19페이지의 성희롱·성폭력 관련한 부분에서 저희가 어쨌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내부적으로 규정도 마련되었는데요. 내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는 내용도 덧붙이면서 “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자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내부의 원칙에 따라서 지원여부가 결정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올해 만든 성희롱·성폭력 규정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회라고 상당히 추상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규정에 근거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꾸리는 절차 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련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

리 심의에 대한 규정 내용을 넣자는 것을 첫 번째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문장에서 “단, 관련 수사 및 기소 등이 없었더라도 성희롱·성폭력 범죄 행위가 명확히 드러난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성희롱·성폭력 범죄’ 그러니까 범죄라는 말이 삭제되는 게 오히려 적용하는데 있어서 포괄성과 유연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들이 본인을 방어할 때 범죄의 사전적 의미 그러니까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죄라고만 해석을 적용할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범죄에 해당하는 판단을 받지 않았다고 방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자”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가지 의견을 드렸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내부 위원회의 지침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그로 인해 취소할 수 있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자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한 규정에서 “성희롱·성폭력 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자”라고 문구를 수정함으로써 해서 규정이 더 강력해지는 효과를 얻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이견이 없으실 것 같아요. 이것은 받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무 쪽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일단 두 번째 ‘범죄’ 부분은 말씀해 주신대로 삭제하는 것으로 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규정 부분은 지금 이 내용이 포함된 부분이 ‘지원신청 부적격자’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지원신청이 부적합합니다.”라고 제시한 부분이 규정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 말씀하신 맥락은 이 규정이 제정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처리 절차가 있다는 명시하자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문구를 어떻게 할지는 고민이 되는데요.

**박종관 위원장 :** 자구에 대한 수정 여부는 나중에 하더라도 내용에 동의해 주시면 되거든요.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위임을 해 주시면 검토해서 규정 제정 여부를 명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지금 이진희 위원님과 같이 신청자격과 관련해서 논의 시간을 길게 가졌습니다만 유의미했구요. 2023년도 공모(안)을 충분히 살펴봐야 할 지점에 관해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추가로 의견을 받겠습니다.

**정정숙 위원 :** 조금 전에 이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규정이 명확하게 한번 더 명시되는 게 왜 의미 있느냐 하면, 지금 그 내용들을 보면 성희롱·성폭력에 특례법이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것만큼 우리 위원회가 만든 우리의 규정도 중시하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규정을 언급하는 것이 전체적인 결과도 맞고 우리 위원회의 입장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문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은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로 가기 전에 제가 문학지원부장을 회의에 오라고 했습니다. 문학지원

과 관련해서 내년도 지원사업의 축소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문도 있었구요. 추경을 포함한 다양한 예산 증액과 관련한 기회에 이런 것이 반드시 반영되어 어려운 현실을 타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위원회가 핵심 내용을 접수받았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장의 의견을 간단히 듣고 의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자료로 살펴보실 수 있는 내용 중에 예산이 아주 크게 줄어든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문학광장의 시스템 개편 예산이 단년으로 올해까지만 적용되고 내년도에는 그 부분이 빠져서 그렇고요. 실제로 공모사업에서는 문예지발간사업이 작년 추경을 통해서 추가로 편성된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문예지를 발간하는 단년 유형에 신청하는 문예지 주체들이 당혹스러운 상황일 텐데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안을 무겁게 보고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 증액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전체 위원님들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추가하실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시백 위원 :** 문학지원부장님이 오신 김에 하나 여쭙보겠습니다. 창작지원 공모를 1차와 2차를 통합해서 1번만 한다는 것이죠?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아르고문학창작기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시백 위원 :** 예.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거기에도 발표지원이라는 유형을 올해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2차례 진행했었는데요. 그것을 1번에 모아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시백 위원 :** 장단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지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것들을 현장에 있는 작가들에게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상당히 호의적이고 좋은 반응이었습니다. 다만, 예산 12억을 4억과 8억으로 시행하던 것을 6억씩 균형을 맞추셨죠?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예.

**이시백 위원 :**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발간지원이라는 원래 사업이 80명에게만 수혜가 되는데요. 그것도 시, 소설, 희곡, 어린이 등을 나누다 보면 수혜의 폭이 응모에 비해서 선정률이 아주 낮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8억에서 6억으로 갑자기 줄일 경우에 선정률이 더 떨어져서 제 생각으로는 단순히 그렇게 조정하는 것보다는 7억 대 5억 정도로 점진적으로 해 나가고 추후 예산을 좀 늘려서 발표지원도 균형 있게 올리는 방안이 어떨까 합니다.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예, 주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발간지원 사업을 예전에 단일 유형으로 진행할 때는 작품집에 수록되는 작품 일부만 제출하도록 해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발간계획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분들도 다수, 예를 들어 시는 70편 정도가 모여야 1권의 시집이 나오는데 그중에 일부만 낼 수 있도록 해서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저희가 발간지원의 성과 관리 측면에서 2년 이내에 작품집을 발표해야 하는데 발간이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들이 다수 일어났습니다. 또 한 측면으로는 발표지원 사업을 새로 만든 배경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해서 따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올해 진행을 해 보니까 발표지원 사업의 수요가 매우 급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발간지원 사업에서 올해 바뀌는 내용이 뭐냐 하면, 1권의 전체 분량을 모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간계획이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분들이 이 사업에 지원신청하고 선정되며 작품집을 발간하도록 하는 것이 개선의 틀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청한 비율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비율 등을 고려해서 현재처럼 맞춰놓은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답변이 되셨는지요. 정종열 위원님도 말씀하십시오.

**정종열 위원 :** 다른 것은 아니고요. 심의전문가 관리 시스템과 관련해서 이번에도 심의위원을 추천할 텐데요. 할 때마다 암호가 자꾸 바뀌고 승인받아야 한다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물어봐야 하는 것인지? 두 번째는 항상 심의위원을 추천할 때 여러 군데서 따로 들어와서 의뢰하고 추천을 하게 되면 저희도 헛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이 위원을 어디에서 추천했는지? 최종적으로 누가 추천되었는지도 들어가서 확인해야 하니까요. 제 생각에 그게 가능하다면 전체 공모의 어느 단계에서 어느 분이 추천되었고 어느 분이 최종적으로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창이 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들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만약 가능하다면 엑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정준화 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예, 첫 번째 문제는 혼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정비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의결 이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개선사항에서 보고드린 1번이 정시공모 통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면에는 나눠서 하던 심의를 1번에 해야 하니까, 예를 들어서 공연예술부 같은 경우에는 매우 심각하거든요. 나눠서 했던 것을 한번에 해야 되는데요. 아마 사무처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안은, 이미 초안으로 저한테 보고된 것이 있는데요. 각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이번 심의 관련해서 어느 사업에 몇 명의 심의위원을 추천해 주셔야 할 지에 대해서 미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리 설명해 드리면 접수 기간인 10월 초에서 한 달 동안 고민을 하고 계셨다가 각 부서에서 요청을 드릴 때 미리 생각해 주셨던 심의위원을 각 부서에 안내해 주시면 되고요. 그 시기는 아마 2번으로 나눠서 될 텐데요. 기존에는 모든 심의위원 선정을 공정성 문제 때문에 접수가 완료된 다음에 위원님들께 여쭙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동시다발로 많이 받으시고 혼란스럽다는 의견을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설명회 이후 10월 초에 각 위원님 별로 추천해 주실 사업과 인원수를 먼저 알려드리고 일부 사업은 심의접수 전에, 일부 사업은 심의접수 이후로 나눠서 심의접수 전에 추천해 주신 분이 혹시 이번 신청과 관련이 있다면 사후에 다시 논의를 드려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열 위원** : 예, 감사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는 추가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홍태림 위원** : 올해 8월로 기억하는데요. 올해 8월쯤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3억 규모의 청년예술가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늦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서 사업의 성과를 특정할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술위 사업이 그동안 창작지원사업에 집중된 와중에 이번 예술인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어서 예술현장 쪽, 특히 청년예술인들의 관심도 많았고 그에 따라서 지원자도 많았던 것은 저희가 이번에 확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년도 예술인력양성부 사업에서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빠지게 되었다면 이에 대해서 “이 사업은 지속하지 않는다.”라는 위원회 차원의 보고라도 받았어야 하는 것인데요. 그런 절차도 없이 그냥 쏙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게 어떤 논리에 따라서 판단이 되고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고요.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차년도에 시범사업을 지속할지 말지를 정하는 기준이 있는지와 이에 대한 결정은 부서 단위에서 끝나는 것인지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답변하셔야 할까요? 예술인력개발원장님 출석하셨나요?

**오영주 예술인력개발원장** : 네,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청년예술가 네트워크 지원을 시범사업으로 했던 것인데요. 그 사업의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결과를 보고요. 내년도에 예비예술인지원 사업이 정부안으로 통과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회에서 웬만하면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예술인사업이 현재 57억이 정부안으로 들어가 있기때문에 여기에서 청년예술 네트워크 사업이 거기에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 예술인력양성부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오영주 원장님의 답변이 짧게 있었는데요. 홍태림 위원님께서 추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죠.

**홍태림 위원** : 예, 아까 말씀하신 예비예술인지원 사업이 국회까지 잘 통과가 되면 그 안에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나왔던 네트워크 사업을 적절하게 녹여낼 수 있는 방안을 위원회나 관련 전문가들과 모여서 논의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의견 감사합니다. 추가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의결 절차에 들어갈까 합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 : 5쪽과 6쪽에 보시면 6쪽에는 공모사업추진계획(안)으로 되어 있고요. 5쪽에는 정시공모추진계획(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도 앞부분의 정시라는 말을 쓰기도 하셨는데요. 민간공연장 활성화 지원 등 추후 별도로 안내하는 것까지 총괄해서 사업설명을 드리고 의결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5쪽의 정시 부분은

해야 합니다. 어쨌든 공모사업추진계획(안)으로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중관 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공모사업 주요 방침 및 큰 개선사항에 대해서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공모시기를 일원화한다거나 과정 및 준비지원사업 등을 통합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최종 의결 절차를 갖기 직전에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여쭙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는 추가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경주 위원 :** 방금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8페이지에 보면 표로 되어 있지 않아요. 2023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추진계획에 저희 공연장과 관련된 사업이 아예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요. 추후 공모를 할 것인데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표에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박중관 위원장 :** 예, 당연하십니다. 의결 전에 모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공모사업은 공모시기를 통합해서 일원화한다는 것은 충분한 사업기간을 갖게 되고 표준화하면 단순화하면서도 지원사업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전체 지원사업에서 과정과 준비지원을 설계해서 운영하겠다는 것과 예산편성 항목을 확대하거나 오랜만에 코로나 상황으로 하지 못했던 설명회를 온라인과 병행하여 직접 설명회를 가져본다는 등 예년과는 다른 제도들을 도입했고요. 지속적으로 예술지원정책의 안정화를 유지하고자 경력 및 활동의 제한기간 등을 과감하게 폐지하는 시도를 해 보고요. 전체적으로 현장에서 큰 효과를 보고 반응과 평가도 좋았던 다년간 지원을 확대한다거나 단계별 지원 등을 현장의 요청에 맞춰서 확대하고 강화하고요. 지역균형 확대 등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성과공유 및 확산을 크게 공유하겠다. 그러면서도 심의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중복심의를 금지하고 유사 중복사업을 검토하고 강화하겠다는 큰 개선사항을 표면에 내세우고 지원사업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에서 주요 논의된 내용들이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해서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부 규정이 있음을 분명히 언급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부분을 밝혀야 한다는 부분과 성희롱·성폭력 혐의를 명확히 드러내는 자로 의미를 조금 더 분명하게 표기함이 바람직하다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데 군데 정시공모와 공모사업 등의 용어가 혼동되어 있고 일부 사업은 지원사업에 누락되어 있는 등 오탈자 수정과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자료의 오류 수정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가지는 수정하여 의결하고 오탈자와 이른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급하게 수정할 상황이 생긴다면 위원장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하고 아주 중요한 사안이면 10월 30일 이전까지 단톡방에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 수정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경주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셨던 외국인사업 신청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오늘을 기점으로 이것이 갖는 문화다양성 측면에서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논의를 이어가서 제도 확대를 함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에 대한 확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장의 용어를 그대로 옮긴다면 “그렇다고 아무 일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니 방법은 찾겠으나 12월 이전까지는 지원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니 현장소통 소위원회 등 기존의 제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이후에 논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개선안을 마련한다. 라는 정도로 오늘 논의를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사결정을 묻겠습니다. 지금 요약한 대로 수정의결을 하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위원님께서서는 말씀하십시오. 온라인으로 회의가 개최되고 있으니 찬성의사도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께서서는 손으로 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반대가 없고 위원님들께서 찬성해 주셔서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쉬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47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16시 00분 장인주 위원 회의 참석)

**박종관 위원장** :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문예진흥기금 정시공모사업 추진계획(안)을 논의하면서 홍태림 위원님께서 지원총괄부 쪽에 체크리스트 관련 질의가 있어서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원총괄부장이 이에 대해 내용을 준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먼저 받고 안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불공정행위와 성희롱·성폭력 관련된 부분을 체크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예술인신문고 과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체크리스트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복지재단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체크리스트에 포함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결사항은 2023년 창작산실 대본공모 유통프로모션 주관처 공모 결정의 건입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이 보고하겠습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해당 사업의 목적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우수작품들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낭독공연과 같은 공연화를 통해서 프로모션이 가능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유형의 사업들을 운영하는 주관처를 공모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7월 말에 지원 대상 요건을 완화하는, 최소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의견들을 반영해서 수정의결이 되었고요. 신청접수를 8월 8일부터 8월 22일까지 진행하였으나 접수현황이 미진하여서 연장해서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12일간 추가로 연장하여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7건이 접수되었고 그 가운데 해당 목적사업 그리고 타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신청서 양식을 제출한 2건의 사업들에 대해서 행정 결격하고 5건에 대해서 9월 19일에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의위원 명단은 31쪽에 있는 총 5인으로 구성해서 심의를 하였고요. 심의기준은 31쪽 (다)항목의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심의를 진행해서 (주)주다컬처가 1억 2,000만 원의 신청액으로 선정이 되었고 지원 결정금액도 1억 2,000만 원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에 예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부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의견 제출을 물었으나 사전에 의견을 제출하신 위원님들께서 없으셨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을 포함하여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심의 결정과 관련한 부분인데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사전에 굉장히 심도 높은 논의를 했고 자격 제한과 관련해서도 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이 잘 반영되어서 주관처가 결정된 것으로 담당부장의 보고가 있습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의안번호 제970호 2023년 창작산실 대본공모 유통프로모션 행사운영 주관처 공모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역시 의사를 물어야 하는데요. 반대하는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의 반대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오늘의 마지막 안건입니다. 지난 전차 회의에서 보고를 드렸던 안건이며 오늘 위원님들께 최종 보고를 드린 후에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제971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전2030 전략 체계 일부 수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류재수 기획조정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안건번호 971호 중장기 전략체계 비전2030 일부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위원회 회의 때 초안 보고를 드렸고, 보완한 내용을 이번 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해마다 경영실적평가를 받게 되고, 경영실적평가 대응이나 예산의 변동 등 환경 변화 등을 감안해서 전략체계를 롤링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3대 전략목표, 7대 전략과제, 20개 세부과제가 있는데 3대 전략목표는 동일하고 7대 전략과제도 동일합니다. 20개 세부과제 중에서 일부 완료가 되었거나 사업예산이 급격히 줄어든 내용을 반영해서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18개 세부과제로 조정을 하는 안입니다.

37쪽을 보시면 2019년 8월 30일에 비전·전략체계 수정의결이 되었고, 해마다 환경변화의

전략체계를 롤링해 오고 있습니다. 일부 수정방안을 보시면 새정부 출범으로 인해서 국정 방향이 재설정되고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는 등 외부 환경변화가 있습니다. 국정 과제 중에서 56번이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입니다. 국민의 문화기본권 보장이나 삶의 질이라는 부분이 강조되고 있고요. 국정과제 57번을 보시면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이라는 부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38쪽 재정 운용과 관련해서는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진하고 재정 비전 2050과 같이 중장기적으로 과감한 개혁과제를 발굴한다는 것을 기재부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어서 혁신 추진 계획을 제출을 한 상태이고, 기재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기재부에서는 유사 중복기능에 관련해서 조정하고 대부서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부분이 강조되고 있고 공공기관 지정기준도 정비해서 과거 기재부 중심에서 부처 중심으로 자율성을 주고 이에 대해서 책임을 평가하는 구조로 가겠다는 내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경영평가에서 지적된 부분 중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향유사업에서 대표적인 사업인데요. 일반 국민의 향유에 대한 구체적 전략과제나 세부 과제들을 명확히 나타낼 필요가 있겠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과제와 본부의 매칭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와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도출 결과들입니다. 40쪽을 보시면 과제의 중요성이나 정부의 정책 방향, 사업 성과를 고려한 과제를 조정한 부분인데요. 일자리 정책 관련해서는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형태로 우리 전략체계의 과제명도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서화가 되면서 전략사업본부와 예술인력개발원 그러니까 1개 본부는 축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술의 미래 동력 확보에 예술의 실험성과 다양성 뒷받침, 기술융합지원 다각화 등으로 되어 있고 창작본부에 인력육성체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 기존 전략과제 첫번째에 너무나 많은 본부가 얼라이먼트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술인력 부분은 문화예술 인력육성체계 혁신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삭제하고요. 인력개발원을 전략사업본부와 함께 묶어서 예술의 미래 동력 확보라는 전략과제 안에 배치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예술극장·미술관의 창작공간으로의 플랫폼 역할 정립은 극장장과 미술관장을 외부 전문가 공개채용을 하였기 때문에 역할 정립이라는 1차 단계의 워딩에서 더 나아가는 '역할 강화'라는 과제명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시 외부 환경변화를 고려한 세부 과제 삭제인데요. 지금 문화예술계 위기 극복과 회복도 중요합니다만 코로나19 예산과 관련해서는 모두 삭감하고 일상회복 모드로 돌아가고 있기에 이 과제는 내년도 경영평가를 받기 위해서 제외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41쪽을 보시면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에 '문화예술을 통한 미래 사회 대응'이라는 과제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문화다양성이나 공공예술 등이었는데 과제명 자체가 설득력이나 명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서 '모두를 위한 예술공유' 밑의 하부 과제로 '문화예술의 새로운 창조와 향유를 위한 권리보장'이라는 과제명을 '문화예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국정과제 워딩과 결합시키면서 미래사회 대응에 있었던 과제들을 이쪽에 배치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공공기관 혁신 방향에서 세부과제를 개선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안정성 확보라는 과제가 있었는데요. 내년도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문예진흥기금에서 재교부하고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무구조의 조정 같은 것을 다 포함해서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워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43쪽에 보시면 아르코비전 2030 체계도라고 해서 2019년도 10월에 수립한 원안이 있고요. 44쪽이 그 이듬해 45쪽이 작년에 수정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6쪽을 보시면 지금 보고 드린 수정(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워딩이 바뀌는 전략체계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담당부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사전의견을 물었습니다만 사전에 의견을 제출하신 위원님은 안 계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림 위원 :** 회의자료 42쪽의 6번 전략과제 수정한 부분이 있잖아요. 2번의 세부과제를 바꾸는 것인데요. 지금 재무구조 개선 배점이 경영평가에서 굉장히 상향되어서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압박이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기관의 전략체계도 상으로 가지고 와서 보면 복잡한 생각이 드는데요. 6번 전략과제에서 ②번 세부과제 수정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원래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안정성 확보인데 이것을 문화예술진흥기금 재무구조 개선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재무구조 개선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해한 바로는 정부가 새로 들어오고 공공기관 혁신을 이야기하면서 일괄적이고 맥락과 디테일이 좀 명확하지 않은 간축 기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안에서 재무구조 개선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을 저희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세부과제 ②번을 이렇게 바꾸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물론 재무구조 개선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사업들을 조정하는 측면에서 합리성을 높이는 것은 상관없는데요. 그런 차원을 넘어서 디테일이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은 압박에 의해서 재무구조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 세부과제를 이렇게 수정하는 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재무구조 개선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를 추가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안정성 확보가 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내용을 빼고 재무구조 개선만 이야기를 하는 게 괜찮은가 싶습니다. 차라리 기금 안정성 확보나 재무구조 개선이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나온 얘기라면 그 2가지를 합쳐서 병기하는 것은 그나마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재원 안정성 확보가 성취되지도 않은 과제인데 이것을 지우는 것에 대해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것도 부장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예, 지금 홍태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타당한 지적이시고요. 재원 안정성 확보라는 부분은 일단 문예진흥기금의 수입구조에 있어서 법정 전입이나 안정성 확보를 한다는 것이 강조된 표현이고요.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부분은 수입구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예를 들어서 복권기금사업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나는예술여행'이나 '방방곡곡사업'들도 복권기금사업의 취지에 맞기 때문에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편성을 추진 한다던지 내년도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전통예술공연진흥재단이나 예술경영지원센터에 교부하는 사업들은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조정을 포함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문예기금과 일반회계의 조정 작업들을 포함하는 과제

명 변경입니다. 지금 홍 위원님의 말씀은 문예진흥기금 재원 안정성이 해소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고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재원 안정성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 이런 표현으로 병기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홍태림 위원 :**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재무구조 개선이 전반적인 예산의 축소를 지향하는 게 아니고.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그것은 아닙니다. 수입과 지출에 있어 개선한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홍태림 위원 :** 사업체계의 합리성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써의 재무구조 개선을 말씀한다는 것이죠?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예, 그렇습니다.

**홍태림 위원 :** 그러면 병기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재 위원 :** 일단 비전이잖아요. 저도 위원이 되기 전에 외부 전문가로 참여했었는데요. 오늘 주신 내용을 떠나서 지금 보니까 저희가 매년 비전을 고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접근법이라고 봅니다. 매년 연도별 업무보고와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비전은 5개년, 4개년으로 비전을 세우는 이유가 있고 그 비전은 긴 일관성과 방향성을 같이 놓고 짜는 게 비전의 역할인데요. 그것에 맞게 논의가 되고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매해 사업이라든지 필요성에 의해서 계속 손을 보다 보니까 처음 것과 지금의 것을 보면 구조 자체가 완전히 깨져있어요. 이것은 그냥 만든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체계구조를 놓고 논의해서 정했던 것인데요. 사실 비전 작업을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비전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의 취지와는 안 맞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때그때 고쳤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금 전의 그런 워딩들이 실무적 워딩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어떤 방향이나 가치성은 상실되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으로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판단은 문체부라든지 정부 변화에 맞추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노력들이 불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협력과 정책의 취지를 맞추는 것은 좋지만 그것도 우리의 계획과 일관성 속에서 맞춰져야지 이렇게 작업이 되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특히 새정부가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조정을 하시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그것에 걸맞게 비전을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비전을 지금 손댈 필요가 굳이 있나? 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면 비전수립 작업을 할 텐데요. 그러니까 그 비전은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동안의 위원회 역사 속에서 지금 현재성을 놓고 비전을 수립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얘기되는 것은 사업적으로 연계하고 대응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자꾸 비전에 얽혀서 하다보니까 비전 결과만 놓고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예술위 비전이 이런 수준의 워딩이야?”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고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의견을 조금 더 듣고 모아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희 위원** : 이원재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제가 지난번 논의에 참여하지 못해서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좀 의아한 것은 최근 2년 동안 예술위에서 대응했던 것 중에 인권이나 성평등 관련한 의제에 대한 대응 경험과 대응 역량이 저는 이전에 비해서 많아지고 높아졌다고 보는 측면이 있는데요. 사실 성평등이나 인권 관련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세부과제들에서는 제시되고 있지 않아서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최근의 동향이라든가 필요한 과제들은 제시되지 않고 약간 타이틀 상의 약간의 변화만 반영된 내용들이라서 현재 굳이 필요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예, 그러니까 지금 이진희 위원님 의견과 관련해서는 46쪽에 있는 비전체계도를 보면 ‘예술현장 중심 지원체계 확립’에 ‘현장 친화적 정책 지원 강화’와 ‘문화예술계 공정환경 조성’이라고 있는데요. 이 과제들이 성희롱·성평등의 실행과제들 형태로 내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창조의 기쁨을 함께 만드는 예술현장의 파트너’라는 비전이나 3대 전략목표는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경영실적 평가를 받게 되면 비전과 전략목표는 당연히 유지를 하더라도 하위의 전략과제나 세부과제 단위에서는 기관의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조정했는지에 대해 매년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비전전략체계에 대한 롤링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체계를 해마다 롤링하게 됩니다.

**이진희 위원** : 그런 부분에서 공정환경 조성의 하위로 들어가 있다는 설명에 대해서는 알겠는데요. 사실 그렇게 접근했을 때 인권이나 성평등 가치가 하위의 실무적 프로세스로 들어가는 것이지 상위의 의제적 체계, 가치적 체계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서 이런 중요한 내용에 대한 반영이 누락된 개선(안)에 대해서 의아함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원재 위원** : 그런데 말씀하신 롤링이 이런 단위에서 롤링이 되면 비전 체계가 아니죠. 솔직히 그 안의 세부 사업을 롤링하시는 거죠. 지금 10대 전략 등을 매년 롤링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5개년 비전인가요? 그냥 매년 세우시면 되는 것이죠. 그것은 다르게 평가되는 것 아닌가요? 비전이 잘못 수립이 되었거나, 예를 들어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세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외부 현장의 환경이나, 그것은 정부 변화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전략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주신 워딩이나 톤 조절을 롤링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전략적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 ‘재정 안정성’이 표현을 빼고 ‘재무구조 개편’이라고 한다는 것이 위원회 비전의 추진체계 10대 등에 들어갈 표현인가요? 롤링 수준의 개념이 아닌 것 같거든요.

**정정숙 위원** :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문화예술위원회의 미션과 비전은 변화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성취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고 있는 거고요. 전략 밑에 세부과제들이 어찌 보면 조금씩 조정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분명히 그 부분에 있어서 ‘재원 안정화’라는 숙제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재무구조’라고 하는 어찌 보면 이상적이죠. 수입과 지출 두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달성하겠다는 것이 적극적인 것은 분명한데 첫 번째 수입 안정에 대한 과제가 희석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병기해서

가져가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난 간담회 때 한번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논의를 한번 했었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혼드는 것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만약 구체적으로 과제들에 대해서 변경이 옳지 않다. 혹은 이렇게 변경되는 게 적절하겠다고 하시면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인 안을 드리는 게 지금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언적인 혹은 전체적인 프레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금 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듯한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 의견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위원님들의 논의를 조금 더 이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8월에 이 안을 위원회 때 제시하고 그때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 설계와 관련해서 연내에 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전체적인 비전 체계를 수립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시기에는 조직개편과 함께 대폭 수정되는 새로운 체계의 비전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기간을 한시적으로 관장하는 비전체계를 일부 수정하는 안이라고 그때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음에도 즉시 대안을 내기가 매우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의견들을 토대로 새롭게 수정할 수 있는 내용이 마땅하지 않아서 부족하나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십사 하는 발의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당연히 오늘 나온 수정의견은 정리하겠지만 수정안을 받아서 의결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부장이 명확하게 수정안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예.

**홍태림 위원 :** 수정안을 정리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조금 더 논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 전에 정리하도록 하고 홍태림 위원의 의견을 조금 더 듣고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홍태림 위원 :** 회의자료 41쪽의 5번 전략과제에서 기존 ②번의 세부과제인 ‘문화예술의 새로운 창조와 향유를 위한 권리보장’이라고 있습니다. 권리보장이 핵심인 부분인데요. 이것을 현재 개선안처럼 바꾸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이 개선안을 굳이 해야 하겠다면 절충안으로 내놓으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을 ①번 세부과제에 합쳐서 진행하고요. 기존 ②번 세부과제의 권리보장이라는 것은 권리보장법이 만들어졌다고 저희 과제가 끝난 것도 아니고 위원회 차원에서 앞으로 꾸준히 유념해 가면서 추진해야 할 과제인데요. 이것을 빼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과제명은 되게 모호한 것이거든요. 사실 ①번 전략과제에 붙여서 해 버려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게 세부 전략과제로 왜 들어갔는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저는 절충안으로 가져야 한다면 개선안으로 내놓은 것을 ①번 세부과제에 합치고 ②번의 권리보장과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외에도 의견이 있으시면 광범위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의견을 받겠습니다.

**정정숙 위원 :**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이원재 위원** : 저는 이번 수정안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비전인데요. ‘미래사회 대응’이라는 것을 삭제시켜버린 겁니다. 그 자리에 들어온 것이 별로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정확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미래사회 대응과 관련한 부분이 왜 의제에서 삭제가 된 것인가?”라고 물으신 건가요?

**이원재 위원** :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을 세울 때 우리 예술위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접점에 대해서 매우 취약한데 사회 변동이 빠르다. 그래서 기술변화나 기후 위기 등 여러 가지 사회 변동에 대한 비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큰 이견이 없어서 ‘미래사회 대응’에 들어갔는데요. 지금 수정안을 보면 미래문제에 대한 대응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 경영체제로 들어가니까 ESG가 붙었지만 경영 문제고요. 그러면 사실 비전으로의 역할을 하기는 힘들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미래사회 대응이 왜 빠졌는지? 그리고 그것과 연결된 의제로 보완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맥락이 무엇인지를 듣고 싶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진희 위원** : 추가 의견이 있는데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번의 기관운영체계 혁신 부분에 있어서 저는 성평등 인권경영 역량의 강화라는 부분이 기관의 혁신과제에서 세부 과제로 적시되어야 1번의 7대 전략과제 중 하나인 예술 현장 중심 지원체계 확립과 상호적으로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관 운영체계 혁신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실무적이고 효율성 중심의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종관 위원장** : 효율적인 게 나쁠 리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충분한 가치가 담기지 않았다는 의견으로 들리고요. 지금까지 나온 의견들을 요약해 보면, 재정구조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목표체계가 불명확하니 조금 더 분명하게 만들라는 주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사회와 관련한 다양한 전략들이 문화예술 안에서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다. 그리고 이진희 위원님께서 성평등·성희롱 등 강화에 대한 위원회의 성과도 있고 명확한 의제화를 위한 목표설정 등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비전 체계와 관련하여 지적이 다소 광범위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잠시 내용을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잠깐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36분 정회)

(16시 39분 속개)

**박종관 위원장** :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위원님들의 의견제시를 받은 이후에 기획조정부장의 추가설명을 한번 더 받기로 하겠습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지금 주신 의견 중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안정성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으로 병기하는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미래사회 대응’이라는 부분이 지금 우리 전략체계 내에서 미래 부분이 반복해서 쓰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40쪽에 보시면 ‘예술의 미래 동력 확보’가 전략과제 단위에 있고 예술의 미래 동력 확보라는 전략과제가 2021년도에 조정안이 만들어지면서 기존에 있었던 세부 과제 중에 ‘문화예술을 통한 미래사회 대응’이라는 세부 과제가 있었는데 ‘미래’가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사회 대응’이라는 과제에서 사업과 연결되는 것은 지역 활력화 사업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예술의 참여 등이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위한 예술공유에 있는 권리보장은 사실 예술인권리보장법에서 얘기하는 그 권리보장이 아닙니다. 기술을 활용해서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향유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어린이·청소년 대상 예술창작 활동 지원의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그 당시 비전을 설정했을 때 권리보장입니다. 이 과제는 모두를 위한 예술공유 관점에서 세부과제가 기술된 부분인데요. 의미의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정하는 안이었습니다. 불구하고 문화예술을 통한 미래 사회 대응이 과제로 유효하다고 할 경우 앞의 ‘미래 예술 동력 확보’와 어떻게 차별화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원재 위원** : 마지막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방법이 제가 처음에 제안했던 비전이 어떻게 왜곡되고 축소되는가를 잘 설명해 주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미래와 미래 동력 대응은 전혀 다른 맥락입니다. 왜 그런 왜곡이 생기느냐 하면, 2019년도 비전을 보시면 ‘문화예술을 통한 미래사회 대응’입니다. 아르코는 과거로 돌아가면 여러 가지 지역화라든지 예술가의 귀촌, 귀농 등을 선도적으로 연구한 적도 있고요. 최근 여러 가지 사회 변동에 대응하자는 것이지 예술의 미래 동력을 만들자는 것과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금씩 고쳐서 결국은 그 다음해에 아예 한 카테고리를 만들죠. ‘예술의 미래 동력 확보’라고요. 그 밑에 2개가 들어가요. 이것도 원래 현장 지원체계나 실험성 등이 현장과 연결되는 것인데 이것을 동력이라고 만들고 그 밑에 다시 육성체계를 만들어요. 지금 이 미래 동력은 처음 예술위의 장기비전으로 예술위원회의 사회적 의제나 국가가 가지고 있었던 일자리, 사회혁신 등 사회변화와 연결하는, 예술위를 확장해 주는 비전은 없어지고 아주 전통적인 인력체계의 혁신. 기술융합은 조금 다르지만 여기에 들어와 있는 카테고리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예술의 실험성, 다양성이라고 되는 겁니다.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인지하시고 원래 비전에 있었던 미래 동력이라는 것은 미래 동력이 아니라 미래적 지향점이라는 것은 사회적 의제를 어떻게 예술을 통해서 예술위의 역량이라든지 정부 정책에서 이니셔티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예술계 안이 동력만 확보하는 게 아니라 예술을 연계한 사회적 의제들, 예를 들어 고령사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가 비전이었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정숙 위원** :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었는데요. 예컨대 밑에 ‘예술의 미래 동력 확보’는 예술의 창작발전을 위한 동력을, 그래서 실험성이나 기술융합, 인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간 것이고요.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 이 부분에서의 ‘미래’라는 것은 사회적 현상들, 미래적인 트렌드에 대해서 또는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에서는 1번과 2번은 통합할 수가 있거든요. 예컨대 ‘문화예술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후원 활성화’로 하고 2번은 예를 들어 ‘사회적 자산으로서 문화예술 가치 보존’이라면 3번에 미래에 대응은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이 전략적인 체계로 미래로 향해서 나간다고 하는, 동력으로써의 미래뿐만 아니라 미래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인가를 계속 가지고 가는 입장일 것 같아서 그것은 살려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예,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은 검토해서 정정숙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예술을 통한 미래사회 대응’은 유지를 하고 밑에 ‘새로운 창조와 향유를 위한 권리보장’은 ‘문화예술을 통한 국민의 질 향상’ 이 과제명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는 어떠신지 여쭙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추가 의견은 없으시죠? 지금 있는 의견을 가지고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기획조정부장이 이야기한 수정안에 대해서 받아 주시면 한 가지 의제는 해결이 되는 것이죠. 미래사회와 관련된 부분은요. 미래사회 전략과 관련된 부분은 방어를 한다. 그런데 위원장으로서 걱정은 세부사업들이 다 따라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말씀하셨듯이 비전이지만 저희가 경영평가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존속되어야 하는 문제인데요.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대의제를 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인데요. 이상적이고 아주 훌륭한 것으로만 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과 어떻게 조화롭게 뭘 만들 것이냐는 문제가 별도로 남아 있는데이. 그런 것들이 걱정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기초부장이 대안을 낸 것에는 그런 것들이 계산되고 설계되는 부분이니까 미래사회 전략과 관련된 부분, 재정구조 안정화와 관련해서는 의제를 강화한다는 부분은 지금 된 것이고요. 나머지 1개 부분과 관련해서도 정리를 해 주시죠. 의결안을 빨리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의 논의는 안 해도 되는 것이죠. 2개의 안을 가지고 수정안을 오늘 의결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의 최종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의견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세요.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예, 기관 운영체계 혁신과제 중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안정성 확보 및 재원구조 개선’이라는 워딩으로 수정했습니다. ‘문화예술을 통한 미래사회 대응’이라는 세부과제는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문화예술의 새로운 창조와 향유를 위한 권리보장’은 ‘문화예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과제명으로 변경하는 안으로 수정의결 제안을 드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지금 부장이 제안한 대로 수정의결을 하고자 하는데요. 위원님들께서는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찬성도 제가 물어야 할 것 같은데요.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반대가 없고 다수의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수정안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 5. 보고 사항

**박종관 위원장** : 이렇게 해서 의결안건 3개는 모두 소화를 했습니다. 연이어서 보고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직무대행은 위원님들께 보고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 : 예, 오늘 보고안건이 4개가 있습니다. 공연장대관료 2차 심의결과를 보고하는 건이 있고요. 국토교통부 협력사업 테마형 임대주택사업 추진경과 및 현황 보고 그리고 블랙리스트 소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2차례에 걸친 4차와 5차 결과보고입니다. 이것은 관련된 부서에서 보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지금 사무처장직무대행으로부터 보고안건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4개의 보고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첫 번째 보고안건인 2022년도 공연장대관료지원 2차 공모 심의 결과보고를 공연예술부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4월부터 7월까지 등록된 공연장에서 공연단체와 개인에 대한 대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제 공연이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필수 제출서류를 통해서 행정심사로 결정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상 장르는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 다원예술 등 총 6개 장르입니다. 다만, 지원을 배분은 배분 예산 내에서 지원결정된 사업에 대해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단체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차 공모사업의 예산 배분안은 17억 2,700만 원이었고요. 접수를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15일간 접수를 받았고요. 이렇게 지원신청된 접수결과가 총 948개 단체에서 1,204개 공연이 지원신청을 하였습니다. 지원규모는 약 39억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적격성 심사를 첫 번째로 소극장협회와 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7개 문화재단 주관처가 행정심사를 거치고 2차 예술위 행정검토를 거쳐서 현재 결정된 사안은 자료 51쪽에 있는 선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36개 단체에서 945개 공연이 결정되었고 각 장르별, 분야별 지원결정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지원 결정 결과도 선정건수는 비수도권이 신청 대비 약 22% 정도였는데 크게 차이 없이 해당 건수를 소화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결정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 결격 사유 같은 경우에는 52쪽 하단에 해

당 건수와 유형들을 저희가 별도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보고드린 사안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행정심사 2차 검토까지 하고 확정 보고를 드린 이후에 옴부즈맨 제도와 이의신청을 통해서 들어온 사업들에 대해서 추가검토를 통해서 추가지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로 편성한 8,800만 원 정도의 규모 안에서 1차 공모 때 이렇게 절차를 통해서 이의제기 신청한 총 7개 사업에 대해서 2,278만 원을 추가 지원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담당 부서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보고사항이지만 지원사업 의결에 준하는 것이라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고 질문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주시고 질문이 있다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검토하셔서 지원결정을 해 주셔야 하는 문제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내 주셨으면 그 의견부터 답변을 드렸을 텐데요. 이 심의결과와 관련해서 저희가 의결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보고를 접수받을까 하는데 이견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이견이 없으므로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공연장대관료지원 2차 공모사업 지원적격성 심사 및 지원대상 결과보고는 보고된 원안대로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고안건은 국토교통부 협력사업 테마형 임대주택사업 추진 경과 및 현황 보고의 건입니다. 박우영 전략개발팀장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영 전략개발팀장 :** 지난 4월 전체회의 때 보고안건으로 보고드린 내용에 덧붙여서 그 이후에 변동된 사항들과 현재 논의 중인 경과들을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 사업의 전신이 국토교통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전달해준 임대주택 관련된 사업입니다. 주택사업이다 보니까 특징은, 실제로 입주자의 특성은 있겠지만 이 사업 자체의 목적이 주택을 공급하며 그 주택에 들어가는 입주자에 대해서 일부 혜택을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서 처음에 저희 쪽에 요청했던 부분은 본인들이 하고 있던 사업에 플러스 알파로 본인들의 쿼터에 더해서 문화예술 분야도 예술가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구성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진행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체부와 협의를 했던 부분이 뭐냐면, 실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대상자들은 예술가들이지만 하드웨어적인 주택에 대한 공급은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되 그 안에 입주하게 되는 입주민을 대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소프트웨어 제공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위탁해서 진행하자고 했던 부분입니다.

본 사업 자체에 대한 정의나 내용은 익숙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회 쪽에 테마 제안을 요청했고 그 테마에 맞춰서 저희가 5개 테마를 제안했고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 4개 테마를 이번 특정 사업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진행했습니다. 다만, 먼저 보고를 드릴 부분이 뭐냐면, 이 사업의 흐름 자체가 분절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올리는 건축사업자가 별도로 LH 쪽에서 공모가 들어가고요. 그 공모가 끝난 다음에 해당 주택을 매입하고 매입을 받은 건물을 가지고 다시 위원회 쪽에 위탁을 보냅니다. 위탁받은 건물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다시 운영사업자를 선정하고요. 그 운영사업자를 선정해서 프로그램 및 입주자 선정으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입주가 되는 시점 자체가 2024년 말 또는 2025년 초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사업자가 신축으로 토지를 알아보고 해당 토지와 관련된 건물을 건축하

기 시작하면 약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건축 시공 기간이 걸립니다. 그 건축 시공 기간에는 감정평가나 중간 검수 과정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요. 최종적으로 매입하기까지는 통상 2년 정도가 소요된다는 통보를 받았습시다.

그래서 2년 이후에 실제 입주민들에 대한 입주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 시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 또는 2025년이 됩니다. 다만, 중간과정에서 사업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 시작 중입니다. 임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주택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예술인과 관련된 테마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브랜딩을 할 예정이고요. 통합브랜딩과 함께 건축사업자들을 모집하는데 홍보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쪽에 지원하고 실제 건축사업자가 선정될 때 문화예술과 관련된 심사위원을 저희가 추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정상으로 봤을 때는 11월 말 또는 12월 초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정 과정이 있고요. 중간과정에서 예술위가 무엇을 할 것이냐 하면, 국토부에서 계속 요청했었던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급 자체를 원하는 부분인데요. 입주민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플러스 그 입주민들이 어떤 테마에 소속되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사업을 안내해 주고 홍보해 주면서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문체부와 협의를 했을 때 내용은 이 부분을 플러스해서 실제 입주민들이 특정 테마 밑에 세부 유형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한 일부 창작공간에 대한 시설들 지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악 분야라고 하면 방음 처리가 된 작업실까지 포함이 되고요. 예술과 기술융합이라고 하면 예술과 기술융합에 대해서 일부 전시를 할 수 있는 기자재를 포함한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마련하는 세부사업들을 제안한 상태고요. 이것은 계속해서 외부전문가들과 문화예술 분야와 민간사업자까지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의견을 받고 고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제 이 사업 자체가 국토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있고요. 문체부도 예술인복지 부분과 관련해서 국정과제 57번으로 공공임대주택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목표로 하는 호수는 매년 200호고요. 매년 200호로 최대 1,000호를 이번 정부 임기까지 제공한다는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설명드리자면 82쪽의 국토부 사업추진 방침을 확인해 주십시오. 사업유형이 총 4가지로 보이는데요. 민간 제안과 특정테마 그리고 가로축으로는 기획과 위탁운영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민간제안형’은 민간사업자가 해당 테마를 다 들고 옵니다. 예를 들면 자립형주택이나 농촌의 귀농주택이라든지 다 들고 오고요. 특정 테마 같은 경우에는 부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협력사업으로 하는 게 저희뿐만 아니라 연세대학교가 있고 보건복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개의 협력을 이끌어내서 3개의 유형별로 특정테마를 선정했고 그중에 저희 문화예술 분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운영과 기획운영의 차이인데요. 기획은 건설사업자가 처음부터 참여해서 토지부터 건축물까지 신축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위탁운영은 특이한 사항인데 LH가 사전에 확보해 놓은 주택들이 있습니다. 주택중에서 후보지로 적당한 곳을 제안했고 제안받은 곳에 위탁만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공모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1, 2, 3, 4가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해당하는 것은 3번과 4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H도 문화예술과 관련된 테마로 공모를 진행한 것은 3번 유형입니다. 3번 유형 같은 경우 표를 보시면 총 650호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예술분야와 관련된 쿼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연차별로 진행할 것인데요. 200호를 저희가 쿼터로 받았고요. 450호 중에서 나머지 50호는 대학교 쪽에 들어갈 것 같고요. 나머지 400호 정도는 장애인 관련된 부분으로 할당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4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4번 같은 경우에는 이미 LH가 매입을 해놓은 상태의 건물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적용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세부 유형별로 문화예술을 나눴던 부분을 포함해야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다가 차라리 4월에 박경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장르에 대한 구분을 두지 않고 진행하는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LH에서 기 보유했던 서초동에 있는 건물 60호를 저희가 일반 예술인 대상으로, 전체를 장르별로 구분 짓지 않고 60호 정도를 올해 안에 위탁사업자를 선정해서 운영 공모하고 입주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런 식의 사업구조를 가졌고요. 이 사업의 특징 자체가 뭐냐 하면, 공공임대주택이다 보니까 입주자들에 대한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입주자들이 실제 들어올 때 제일 중요한 월세 같은 경우도 주변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입주가 가능하고요. 실제 여기에 들어가는 건축물들은 대부분이 1인 가구 중심의 원룸 형식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세탁기나 인덕션 등이 함께 들어가 있는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은 LH에서 1번, 2번, 3번에 대한 건축사업자 공모와 운영사업자 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쪽 3번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해당 토지와 건축물을 매입해서 저희가 처음 제안했던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물론 주거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정해져 있으니 상관이 없는데요. 주거 공간 외에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근린시설 관련된 부분들을 함께 제안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아마 올해 공모가 진행되어 어느 정도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200호라는 게 저희의 할당 부분이라는 하지만 저희 쪽의 테마를 들고 건축사업자들이 지원을 안 하는 경우 내년도 공모로 이어서 목표달성을 위해서 공모를 진행하도록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최종적으로 저희 문화예술 분야로 할당을 받은 것은 260호고요. 60호는 이미 건축물이 있고 나머지 200호에 대해서 LH가 건축사업자를 공모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궁금해하실 수 있는 사안들이 “정말 위원회가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있냐?”라고 했을 때 사실 건축 관련되거나 임대업과 관련된 운영 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입주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부분들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임대주택과 관련된 운영 능력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LH와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민간운영사업자를 별도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하고 공모에 선정된 민간운영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대차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LH한테 받은 것을 그대로 운영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후속 계획부분입니다. 지금 공모가 나간 부분들은 LH에서 진행 중인 부분이고요. 저희 쪽은 서초동 관련 운영사업자 공모를 10월 중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맞물려서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각종 홍보나 전문가 자문회의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알파로 통합브랜드 관련해서 구축할 수 있도록 계약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쳤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 위원장 :** 박우영 전략개발팀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나 4월에 개괄 보고를 하였고요. 6개월이 경과되어 구체적인 보고를 한 것인데요. 그간 진행된 내용들을 요약 없이 보고하면서 보고 내용이 조금 광범위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자체가 국토부 국정과제 사업이기도 하고 문체부의 국정과제 사업이라서 비중도 있고 의미도 있는 사업이라서 당연히 시행 전에 위원회에 보고도 되어야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청취하여 반영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남요원 감사 :** 서초동에 60호라고 했잖아요?

**박우영 전략개발팀장 :** 예, 60호입니다.

**남요원 감사 :** 60호인데 거기에는 1인 주거의 원룸 형태로 운영되어지는 60호로 서초동에 이미 만들어진 것이죠?

**박우영 전략개발팀장 :** 예.

**남요원 감사 :** 일단 시중가격의 50%로인데요. 60호에 대한 수요분석은 해 봤어요?

**박우영 전략개발팀장 :** 대상지에 관련된 수요분석을 지속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남요원 감사 :** 우리 예술인들이 들어오는 예술인 주택 정책이잖아요? 만약 60호를 우리가 분양했을 때, 그러니까 임대 수요를 우리가 특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아무래도 1인 주거면 청년세대일 것이고요. 1인 주거의 공간으로 보면 청년예술가가 주된 대상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냥 주관적인 전망을 하는 겁니다. 자료가 충실하지 않아서요. 수요대상이 특정되어 질 수 있다고 하면, 수요예측을 했다고 하면 청년예술가들이 임대료. 서초동에서 50%면 상대적으로 싼 가격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예술가들의 전체적인 경제활동 등 수준에서는 절대적 가치로 굉장히 비싼 가격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LH하고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협력형 모델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50% 가격이 아니라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월세를 적용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 시장가의 30% 정도죠. 그러니까 양측이 이익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를 여쭙보고 싶습니다.

**박우영 전략개발팀장 :** 예, 말씀하신 사항은 협의가 가능하지만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사실 보증금과 월세 개념으로 같이 적용되는 부분이라서요. 보증금을 일부 올리면서 월세를 낮출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LH 쪽에 확인을 했던 부분인데요. 다만, 이 보증금에 대한 부분이 주변시세의 몇 %가 될지는 LH에서 정확하게 다시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남요원 감사 :**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LH의 입장에서 임대사업을 할 때 임대사업의 실패 요인 중 하나가 보증금입니다. 우리와의 협력사업은 대부분 서울지역에서 이루어질 것이고요. 이게 잘 돼서 지방에 있는 대도시까지 확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창작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주거 공간의 안정성까지 가져올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대단히 촉진하고 장려해야 하며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LH에는 상당 부분 공실로 되어 있는 임대주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요인을 보면 보증금이 굉장히 비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가액의 몇 %를 보증금으로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보증금도 비싼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은행대출이 여의치 않다는 겁니다. 거꾸로 이야기를 하자면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우리가 주거안정자금을

쓰고 있잖아요. 그것은 별도의 문제인 것이고 LH와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이 사업을 완성시켜 갈 것이냐? 그래서 보증금액도 낮춰야 하고 월세도 상대적 비교로 적용할 때 우리에게 쉽지 않은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세를 낮추기 위해서 보증금을 올리겠다는 것은 기존 방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문체부의 국정과제 사업이고 국토부도 국정과제 사업이라고 하면 이 과제사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디폴트값을 탄력적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여전히 LH하고 협의가 가능한 것이지가 궁금합니다.

**박우영 전략개발팀장 :**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은 협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제안하는 형식 그리고 민간에서 제안하는 형식 외에 다른 부처들도 다 엮여있는 상태인데요. 실제 50%라고 하더라도, 민간사업자들과 미팅했을 때 결과가 뭐였냐 하면 그중에 30%는 LH한테 주택의 사용료인 임대료를 납부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20%를 가지고 운영사업자가 운영을 하는 입장입니다. 아시겠지만 호실을 50호로 잡아도 실제로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 자체가 많지 않아서 운영이 타이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입주조건이나 입주자들 모집이 용이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는 것은 아예 심사에서 제외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초동의 위치에 대해서 외부 민간사업자에게 컨설팅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 정도 위치에 이 정도 지리와 접근성이면 예술인이 아니고 일반인 대상으로 하더라도 충분한 수요가 있을 것 같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보증금 관련해서도 저희가 타협을 했던 게 뭐냐 하면 보증금이 몇천만 원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차로 통보받기로는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가 40~50만 원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시세나 입주에 대해서 부담 없이 예술가들이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가지고 실제 민간사업자의 수익 때문에 저희와 LH 그리고 민간사업자 등 3자 간에 협의해야 하는 구조적인 과정은 남아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시면 접수 하도록 할까요?

**이원재 위원 :** 간단하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프로세스가 중요한데요. 3번의 테마형 관련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에서 문제가 되었던 게 막상 공사에 들어가면 업체들 중심으로 진행이 돼서 너무 안 좋게 나와요. 200호나 250호를 해 봤을 때도 너무 압축형 빌라 모델로 나와서 처음 취지와는 다른데요. 특정 테마형은 예술위가 문체부와 한다면 그런 공간 구성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델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델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것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커뮤니티 근린시설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카고처럼 주택들이 연결되고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방을 주는 것처럼 되는 경우가 생겨서 테마형 주거라는 공간구조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공사 과정에서 설계할 때 조금 더 고민을 하고요. 모델이 매력적이어야 이런 사업이 확장되잖아요. 많이 힘들고 바쁘시겠지만 조금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우영 전략개발팀장** : 보고를 조금 더 드리면, 커뮤니티 시설이 충분히 넓어야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와 사례 조사를 했고요. 실제로 이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에 있어서 세대 당 2.5제곱미터 정도의 기본적인, 그러니까 50호라고 하면 100제곱미터의 커뮤니티 시설은 가지고 와야 한다는 무조건이 있습니다. 다만, 우려하시는 것처럼 프로그램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재원이 필요하긴 한데요. 이것은 사실상 저희가 내년도에 문체부 쪽의 일반회계 예산을 할애받기로 구두로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원재 위원** : 그래서 운영비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공간 자체가 지금까지는 되게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술가들이 질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가구수 구성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1인, 2인, 3인으로 되어 있나요?

**박우영 전략개발팀장** : 아닙니다. 전체가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하인드로 말씀드리면 1차년도 때 사업목표가 200호라는 게 있었고요. 호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가구 중심의 2인이나 3인으로 구성하기가 난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이게 1차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공모가 나가는 과정이라서 안착이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다가구 주택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될 수 있도록 LH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원재 위원** : 이 사업을 하면서 많이 들어오는 컴플레인이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학생이나 젊은 예술가들만이 아니라 2인이나 3인을 요구하는 구조가 있어서요. 그런 것은 이후에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우영 전략개발팀장** : 예,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추가하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2개의 보고안건은 블랙리스트 회복을 위한 소위원회 4차와 5차 회의 결과보고입니다. 정정숙 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숙 위원** : 예,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회의자료 88쪽에 있습니다. 4차 소위원회는 8월 31일에 이루어졌는데요. 기존 TF의 활동보고서 회의록 첨부 문제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고 창작산실 건과 관련해서 사실관계확인서를 감사실에 제출한 것을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60일 이내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억 사업을 하게 될 텐데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최소한의 계획안을 마련하자는 것까지 4차 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5차 회의는 91쪽에 나와 있는데요. 9월 14일에 이루어졌고요. 이때는 사회적 기억 사업과 관련된 포럼 기획(안)을 가지고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회적 기억 사업과 관련해서는 경험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라 실제로 다른 사건에서 이루어졌던 사회적 기억 사업들의 사례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 겸 자문회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문체부 이행협치단 쪽에서 사회적 기억 사업을 기획했었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 1인 그리고 피해자 관점에서 심리적으로 치유를 전문으로

하는 분 1인, 그리고 제도적인 보완 등을 어떻게 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전문가 1인 등 3인을 모셔서 자문회의를 하기로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체부에서 사회적 기억 사업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했고요. 영화진흥위원회에서도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에 대한 구술 채록 용역을 발주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사회적 기억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2019년에 우리 예술위에서 팝업시어터 관련해서 공청회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사회적 기억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후속조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계승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당시에 계획했던 대로 되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공유하는 작업을 5차 회의에서 했습니다. 5차 회의의 결론은 전문가들의 간담회를 거쳐서 우리 예술위가 사회적 기억 사업을 정말 의미 있게 할 수 있도록 기획 관련 계획 수립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소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보고를 접수할까요? 그러면 소위원회 접수를 마지막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4개의 보고안건을 일괄하여 접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2022년도 10월 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사무처장직무대행은 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일정 조정)

## 6. 폐 회 선 언

**박종관 위원장 :** 오늘 위원회 역시 만만치 않은 의결안건과 보고안건으로 시간이 많이 지체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지 못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내해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얼마 남지 않아서 속기록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서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되실 때 예술가의 집에 방문해서 속기록을 검토하고 서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예술가의 집 전체가 공사 중인 상황이라서 직원들이 대학로예술극장에서 근무하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방문하시기 하루 전에 홍보팀으로 연락을 해 주셔서 직원들이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직원들의 안내를 받아서 불편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시면 이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340차 전체회의를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28분 폐회)